

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

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(☎ 044-201-3665)

- ▶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“지역행복생활권”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, “지방 중추도시권” 육성시책이 본격화됩니다.
- ▶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,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·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제시한 구성 기준*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2014년 2월까지 구성하게 됩니다.
- * 구성 기준 :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
- 국토부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도시활력 회복, 신성장동력 확보,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발전전략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,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▶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추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,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 > 보도자료>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

<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 주요 내용 >

- ▶ 추진배경 :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운영하여 국토 균형발전 도모
- ▶ 주요내용
 - ① (도시권 구성) 인구, 접근성, 지리작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
 - ② (발전계획 수립) 지자체에서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
 - ③ (연계협력사업 지원) 도시권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을 검토, 개별 도시권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
 - * 사업순위 조정, 공모 우선반영, 보조율 확대, 규제완화 등
- ▶ 시행일 : 2014.2. (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및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 발표)